

## 제2장

# SDGs 통계 거버넌스 연구

박영실 · 이영미

### 요 약

#### □ 연구배경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통계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이다.
- 시의성 있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통계생산자뿐 아니라 정책입안자, 학계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 □ 연구내용

- 해외사례 검토
  - 글로벌 수준에서의 SDGs 통계 거버넌스인 지표 전문가그룹(IAEG-SDGs)과 통계 조정고 위급그룹(HLG-PCCB)의 활동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이 속한 아태지역과 모범사례로서의 유럽지역의 SDGs 통계 로드맵을 검토하였다.
  - 해외 주요 사례를 보면, 상당수의 국가가 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에서 통계청이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현황 분석 및 통계 거버넌스 상의 문제점 진단
  - 국내 SDGs 이행 주체(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별로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특히 통계청의 지금까지의 활동현황을 정리하였다.
  - 그 과정에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업무추진력 약화, 부처 내 SDGs 대응창구의 분산, 통계와 정책의 괴리 등이 향후 SDGs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 □ 주요 제안

- SDGs 이행과정에서 통계청이 향후 수행하게 될 업무를 파악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SDGs 거버넌스 내에서 지표분야의 워킹그룹을 제안하였다.
- 이 그룹은 통계생산자와 정책입안자, 통계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뿐 아니라 SDGs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역량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SDGs, 지표, 거버넌스

## 제1절 서론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경제·사회·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하다(김태균, 2016). 거버넌스는 어떤 복잡한 활동이나 시스템을 조정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지난 30년에 걸쳐 인간사회를 이해하는 비판적 틀로 자리잡아 왔다(Seyle and King, 2014). 특히, 거버넌스는 거버먼트(government)와 대비하여 최근 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거버먼트가 집중된 권력을 계층적으로 사용하여 지시와 통제로 특징지어지는 반면에 거버넌스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공공재를 정의하고 생산, 공급하는 방식(소진광, 2007; 김태균 2016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SDGs 거버넌스의 한축으로 통계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한다. 통계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는 통계가 정책적 대상 이라기보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수단적인 의미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된 통계는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이나 협력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하기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특히, 경제·사회·환경 등 전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SDGs의 경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개입되기 때문에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국내와 글로벌을 연계하고, 동시에 국내의 이해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이라는 형태를 띠어야 한다.

효과적인 통계 거버넌스 모형을 탐색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글로벌 및 지역 수준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SDGs 통계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SDGs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안적인 통계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제2절 글로벌 및 지역 수준의 SDGs 통계 거버넌스

### 1. 글로벌 수준

2015년 9월 UN총회에서는 세계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정책목표로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인류(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P를 중심으로 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UN총회 결의문에 따르면, 목표와 세부목표의 후속조치 및 검토(follow-up and review)는 일련의 글로벌지표를 통해 실시된다. 글로벌지표 프레임워크는 SDGs 지표 전문가그룹(Inter Agency and Expert Groups on SDG Indicators, IAEG-SDGs)이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는 UN통계위원회에 의해 합의(agree), UN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와 총회(General Assembly, GA)에서 채택(adopt)되었다.

지표에 기반한 글로벌 수준에서의 이행정도 평가는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주도로 진행된다. HLPF는 UNGA(HLPF, 4년 주기)와 ECOSOC(1년 주기) 하에 개최되며, 매년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국별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port, VNR)와 UN사무총장 주도하에 작성된 이행보고서(SDG Progress Report)를 근간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당해 연도 주요 이슈들을 논의한다. 이 두 개의 보고서와 별도로 4년마다 과학자 그룹에 의해 과학과 정책을 연계한 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가 발간될 예정이다.

이행 진전도를 측정하고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No one is left behind) 위해서는 양질의 접근가능하며 시의적절하고 신뢰할만한 세분화된(disaggregated)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는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개도국과 특히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국가 및 중간소득국가의 통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합의하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ion, GDP)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 측정방법을 개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UN, 2015, para 48). 구체적으로 세부목표 17.18과 17.19에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 통계생산과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통합적인 통계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이주신분,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By 2020, enhance capacity-buil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availability of high-quality, timely and reliable data disaggregated by income, gender, age, race,

ethnicity, migratory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

- ▶ 17.19 2030년까지 GDP 보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성과 측정치 개발에 대한 현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역량구축을 지원(By 2030, build on existing initiatives to develop measurements of progress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complement gross domestic product, and support statistical capacity-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

UN 결의문에서 보듯 글로벌 수준에서 지표 관련 활동은 ECOSOC 산하의 UN통계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였다. UN통계위원회는 46차 세션('15.3.)에서 두 그룹을 창설하여 지표 개발 및 SDGs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나는 IAEG-SDGs이며, 다른 하나는 통계 역량강화, 조정, 파트너십을 위한 고위그룹(High 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Building for Statistics fo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LG-PCCB)이다(UN, 2017a; 2017b).

### 1) IAEG-SDGs<sup>1)</sup>

IAEG-SDGs는 2015년 3월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28개국 통계청과 지역위원회 및 국제기구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이 기구의 핵심 역할은 ①SDGs 목표 및 세부목표의 후속조치와 검토를 위한 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②각종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③지표와 메타데이터에 관한 이슈와 방법론 개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④SDGs 모니터링에 관련된 통계 역량 강화 활동에 힘쓰고 통계위원회 및 HLG-PCCB 권고안 등을 개발하거나 ⑤SDGs 오픈 대쉬보드와 데이터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⑥SDGs 데이터 포럼 사무국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IAEG-SDGs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연 2회 봄과 가을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지표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IAEG-SDGs는 '15.6.~'16.2. 동안에 글로벌지표 리스트 초안(230개, 중복지표포함 시 241개)을 개발하여, 47차 유엔통계위원회('16.3.)에 제출하였다. 동 위원회는 기술적인 개선사항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출발점(practical starting point)이라는데 동의하였으며, 강력하고 품질이 높은 지표프레임워크의 개발은 시간을 요하는 기술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프레임워크 검토 계획을 48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IAEG-SDGs는 '16.3.~'17.2 동안 지표 개정 프레임워크를

1) 박영실 외(2017)를 요약 정리하였음

개발(232개, 중복지표포함 시 244개)하여 48차 세션('17.3.)에 제출하였다. 본회의에서 동 프레임워크가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되었으며 이 안은 이후 ECOSOC('17.6.)을 거쳐 UNGA('17.7.)에서 채택되었다.

〈표 2-1〉 IAEG-SDGs 회의 및 주요 안건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일시	'15.6.1.~6.2.	'15.10.26.~10.28.	'16.3.30.~4.1.	'16.11.15.~18.	'17.3.28.~3.31.	'17.11.11.~14.
장소	미국, 뉴욕	태국, 방콕	멕시코, 멕시코시티	스위스, 제네바	캐나다, 오타와	바레인, 마나마
논의 안건	그룹운영방식 지표프레임 워크 지표 선정과정	초기지표안 선정	지표티어분류 메타데이터 글로벌보고 체계워킹그룹 구성	티어분류갱신 티어3개선계획 지표개정안 국제기구보고 체계	티어3개발 계획 데이터 세분화	국제기구 자료 제공 가이드 라인 및 티어 재분류

UN 통계위(47차) : 실질적 출발점으로 서의 프레임워크 합의	UN 통계위(48차) : 위원국간 거의 만장 일치 합의	UNECOSOC ( '17.6) 및 GA ( '17.7) 채택
230개 지표안 (241개)	232개 지표안 (24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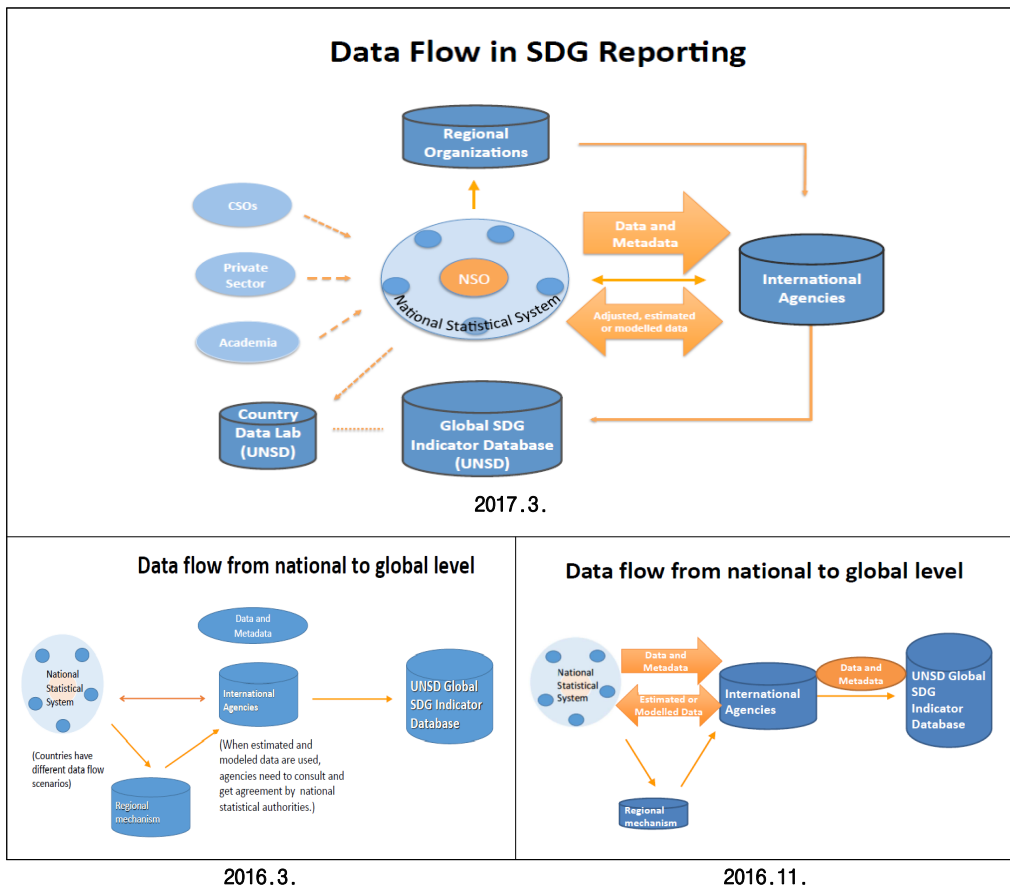
지표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IAEG-SDGs는 지표를 데이터 가용성 및 방법론 존재 여부에 따라서 세 개의 티어(tier)로 구분하였다. 티어1은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 및 표준이 존재하며,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티어2는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 및 표준이 존재하나 데이터 사용에 한계가 있는 경우, 티어3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과 표준이 부재하는 경우이다. 글로벌 수준의 보고는 티어1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티어2에 대해서는 지표 산출을 위한 통계역량강화를, 티어3은 지표 측정 방법론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티어3 지표에 대해서는 지정된 관리기관(custodian agency) 즉 관련 국제 기구로 하여금, 지표개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데이터 가용성과 방법론 개발에 따른 지표 재분류 작업은 연1회(가을) 진행될 예정이다.2)

SDGs 데이터 및 통계는 국가 → 국제기구 → UN통계처(UN Statistical Division, UNSD)로 제공될 예정이다. 국가가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국제기구에 제공

2) 2017년 4월 기준, 티어1은 93개, 티어2는 66개, 티어3은 68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5개 지표는 다중티어로 분류되었는데, 지표의 하위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 티어에 속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면, 국제기구는 수집된 자료를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게 가공하여 UNSD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한다. 최종적으로 UNSD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국가자료 및 지역·글로벌 수준 집계 자료를 업데이트함으로써 투명성과 접근가능성을 담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UN 차원의 지역위원회는 국가와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전송을 용이하게 해주는 조정역할을 한다.

글로벌 수준의 자료 제출과정에서는 개별 국가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하나의 지표는 단일의 국제기구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②표준화된 국가공식통계자료를 기초로 하되, ③다른 방법론이 사용될 경우 국가 통계청의 검토와 합의를 거쳐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데이터 불일치 이슈가 설명되도록 하며, ④데이터와 메타데이터는 품질담보와 함께 투명한 방법으로 배포되도록 권고하고 있다.3)



[그림 2-1] SDGs 자료 제공 흐름도

3) 글로벌 보고를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과 자료수집 캘린더는 49차 UN통계위원회(‘18.3.예정)에서 발표될 것이다.

[그림 2-1]은 SDG 데이터가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도식화한 것인데, 2016년 3월과 11월 그리고 2017년 3월 개정 현황이다. 아래 원편의 초기 모델과 비교해 볼 때, 국가, 지역 위원회, 국제기구, UNSD 역할은 동일하나, 개별 국가 단위에 대한 정교화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 및 민간영역, 학계 등 비공식 데이터 참여과정을 모델 안에 포섭하고, 국가 데이터 랩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

향후 IAEG-SDGs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지표를 검토(수정, 삭제, 대체 등)할 계획에 있다. 매년 측정단위 교정, 지표 용어 명확화, 철자 혹은 편집 수정사항, 지표의 의미가 유지되는 선에서의 소소한 이슈 등을 검토하여, 15년간 2회에 걸쳐 지표 프레임워크를 종합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때 지표가 세부목표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세부목표의 모든 면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지표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데이터 원천이 확보된 경우, 티어3 지표의 방법론 개발이 지연되거나 예상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경우, 세부목표 진행상황을 지표가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표가 추가(addition), 삭제(deletion), 수정(refinement or adjustment)될 것이다.

한편, IAEG-SDGs는 SDMX(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 지리정보(Geospatial information), 상호연계(Interlinkage)에 관한 3개의 워킹그룹과 데이터 세분화에 관한 하위 그룹(subgroup)을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 2) HLG-PCCB

HLG-PCCB는 통계분야의 파트너십과 조정, 역량개발을 위해 22개 통계청 대표를 회원으로 46차 통계위원회('15.3.)에서 설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그룹은 ①지속가능발전목표가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의한 통계적 모니터링과 보고의 프레임워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리더십을 제공하고, ②본 목표의 추진과 검토체계에서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역량개발과 조정기능을 하며 이것이 국제적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③통계적 역량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자원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준다. 또한 ④IAEG-SDGs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인프라의 현대화와 조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sup>4)</sup>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민간 부문의 자원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 ⑤SDGs 이행을 위해 통계사회와 기타 관련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표적으로 ⑥지속가능발전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2013년 5월 Post-2015 의제 관련 고위급 패널 보고서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의 통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데이터 개방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데이터 유용성을 증가시키고 데이터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에 대한 세계포럼(World Data Forum)을 조직하여 민간, 학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글로벌 통계사회의 협력과 대외활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포럼은 2017년 1월 15~18일간 케이프타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본 포럼에서 글로벌 액션플랜(Global Action Plan)이 발표되었다.

글로벌 액션플랜은 2030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통계시스템의 현대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로드맵으로 제3차 HLG-PCCB 회의(2016년 1월)에서 제안되었다. 이 플랜은 2030 의제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통계역량구축에 대한 계획, 실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역, 국가, 지자체 수준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통해 진행될 것이며 국제기구들과 여러 파트너들 간의 노력 및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액션플랜은 6가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그 분야는 ①지속가능발전 데이터에 관한 조정과 전략적 리더십, ②국가통계시스템의 혁신(innovation)과 현대화(modernization), ③2030 의제 모니터링에 강조점을 둔 기본통계활동과 프로그램 강화, ④지속가능발전 데이터의 배포와 활용, ⑤지속가능발전 데이터를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파트너십, ⑥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자원 동원과 조정이다.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지속가능발전 데이터에 관한 조정과 전략적 리더십** : 국가 통계시스템과 통계기구의 조정역할 강화와 그 역할의 지역 및 국제기구로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 ▶ **국가통계시스템의 혁신과 현대화** :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데이터 생태계의 요구와 기회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시스템의 거버넌스와 제도의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통계적 기준(standards)을 현대화하여, 데이터를 통합하고 여러 단계의 통계생산과정에서 데이터 교환(exchange)을 위한 자동화(automation)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주요 통계 활동에 적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 ▶ **기본통계활동과 프로그램 강화** : 첫째 2030 의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가구조사 프로그램, 통합조사 시스템, 비즈니스 및 다른 경제조사 프로그램, 센서스 프로그램, 인구동태 통계 프로그램, 국제비교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한다. 둘째 2030 의제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환경 통계의 통합 수집을 위해 국가통계 등록자료(register)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사 자료나 혹은 다른 출처 자료와의 통합 사용을 확대한다. 셋째 국가계정(System of National Accounting) 및 환경경제계정(The System for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을 확대 강화한다. 넷째 모든 수준에서 지리 자료와 통계생산 프로그램을 통합한다. 다섯째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인구그룹으로 데이터를 확대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공식통계 범위 내에서 개발이 더딘 영역의 데이터 생산을 확대·강화한다.

- ▶ **지속가능발전 데이터의 배포와 활용:** 관련된 혁신전략을 개발 장려한다.
- ▶ **지속가능발전 데이터를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파트너십 :** 데이터 생산과 활용에 관여한 정부, 학계, 시민사회, 민간영역 및 다른 이해당사자와 국가 및 국제 통계 시스템 간의 파트너십을 개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마지막으로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자원 동원**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액션 플랜의 이행을 통해서 국가통계 및 통계조정 간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SDGs 지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국가통계의 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액션플랜에서는 이 지침이 SDGs 지표만을 위한 역량강화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통계시스템 강화가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HLG-PCCB와 IAEG-SDGs는 2017년부터 공동 하위그룹(subgroup)을 구축하여 지표작성에 필요한 우선적인 역량개발 분야를 선정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 2. 지역수준

이러한 글로벌 수준에서의 지표개발 활동 및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은 UN 산하 지역위원회를 매개로 국가 단위로 전파된다. 여기에서는 한국이 속한 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와 함께 UN유럽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 위원회에서는 로드맵을 구축하여 지역협력을 촉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특히 UNECE는 구체적인 통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해 볼 만하다.

### 1) UNESCAP의 아시아태평양 포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포럼(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APFSD)은 2014년에 출범하였다. 이 포럼은 2013년 8월 ‘아시아태평양 장관회담’<sup>5)</sup>의 후속조치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HLPF 지역 메커니즘 성격을 갖는다(UNESCAP, 2014).

5) 장관회담의 부제는 MDGs에서 2015 유엔발전의제로의 전환(the Asia-Pacific Ministerial Dialogue: From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이다.

제1차 포럼(2014년 5월)에서 아태지역 로드맵 개발을 합의하였고 이후 두 차례 포럼을 거쳐 제4차 포럼(2017년 3월)에서 지역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이 로드맵은 회원국 국가 발전 전략과 그 정책 및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관련 국제규율과 협약(commitment)을 준수하며, 각국 정부나 지역 메커니즘에 새로운 협약이나 보고를 비롯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2030 의제의 보편성 및 유연성을 유지하고 국가 및 지역 현황과 역량, 발전수준의 상이성을 반영하려는 목적을 갖는다(UNESCAP, 2017). 이 로드맵을 통해 우선순위 사안에 따라 회원국 간 지역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UNESCAP 사무국과 유엔 기금 및 계획, 특수기구, 지역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이고 효율적이며 조율된 형태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 간에 더욱 효과적으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아태지역의 우선 협력분야는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과 주제 이슈로 구분된다.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영역에는 데이터와 통계, 기술, 금융,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북남·남남·국제 및 지역 파트너십이 포함되며, 주제 이슈에는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발전, 재난위험 감소와 회복력 강화(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기후변화 대응, 자연 자원 관리, 2030 의제와의 연계,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와 통계는 특히 아태지역에서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 SDGs 글로벌 지표 중 지역별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절반 정도이며, 어느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포용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자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이며 접근가능한 고품질의 세분화된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국가통계 역량과 이를 활용하여 근거기반의 정책을 수립, 관리, 검토할 수 있는 정부역량이 무엇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과를 추적하고 정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며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통계적 근거를 제공할 국가통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SDGs 글로벌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아태포럼에서 지역로드맵의 경과가 추적된다. 이 과정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므로 회원국이 추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검토과정에는 회원국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다른 이해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 2) UNESCAP 통계위원회의 공동비전 및 행동기본계획

APFSD 지역로드맵의 데이터 및 통계 전략은 UNESCAP 제5차 통계위원회에서 채택한 “공동비전 및 행동기본계획(A Collective Vision and Framework for Action)”에 근거한 것이다. 이 공동비전 및 행동계획은 SDGs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국가통계시스템이 공통 기준 및 품질표준 등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등을 포함한 자원동원 과정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역내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마련되었다(UNESCAP, 2016).

공동비전 및 행동계획은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①통계 사용자와 생산자 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이를 위한 자원 투자(Engaging users and investing in statistics), ②통계품질 개선과 현대화 추진 법적 근거 마련(Assuring quality and instilling trust in statistics), ③통합분석을 위한 자료연계(Integrated statistics for integrated analysis), ④통계비즈니스 모델의 현대화(Modernizing statistical business processes), ⑤스킬과 인적자원(Having requisite skills set).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통계 사용자 참여와 투자:** 2030 의제의 후속조치와 평가 과정에서 통계의 중요한 역할은 통계 사용자와 생산자가 데이터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와 역량 차이, 목표 인구집단을 확인하는 과정을 조율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참여는 공식통계의 가치와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따라서, 통계기관 고위급은 정책입안자들과의 교류를 늘려 국가통계시스템이 사용자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하고 있는 목표는 두 가지이다.

- 목표1 : 국가통계시스템이 2030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통계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SDGs 이행 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데이터 플랫폼, 공식통계의 다양한 사용자 그룹 참여 보장을 위한 툴킷, 데이터 접근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공표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 목표2 : 국가통계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통계 사용자들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공식통계의 가치에 관한 사례연구, 국가통계시스템 자원동원을 위한 툴킷, 통계생산 비용 추정을 위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핵심적인 통계의 생산과 공표 비용에 관한 국가별 사례연구, 국가통계시스템에서의 비용효과 분석 및 국가경험에 관한 문서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통계품질보장과 신뢰구축:** 공식통계가 활용되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품질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통계시스템은 지표를 포함한 점검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이 점검에는 여러 다른 기관이 참여하므로, 통계수장은 리더 역할과 통계조정역할을 해야 한다.

- 목표1: 국가통계시스템은 국가통계기관이 갖는 적합한 조정 권한과 책임에 맞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공식통계기본원칙에 따른다 → 통계법 제·개정 등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 목표2: 국가통계시스템은 통계에 관한 국가 권한기관으로써, 국가발전계획을 점검

-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 체계에 걸친, 변화가능한 통계발전전략과 2030 의제를 공식화하고 시행한다 → 통계발전전략에 관한 모범사례, 국가통계시스템의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애드보커시 자료, 국가통계시스템을 위한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행을 위한 가이드언스 등이 필요하다.
- 목표3: 국가통계시스템은 전 체계에 걸친 통계품질보장 프레임워크를 시행한다 → 공식통계의 품질보장프레임워크, 품질보장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가이드언스 등이 요구된다.
- ▶ **통합분석을 위한 자료의 연계:** 사회·환경·경제 분야를 통합분석하기 위한 기틀로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출처의 데이터 활용에 관한 혁신적 사고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기술과 혁신, 제도적 환경 및 각종 인프라 증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 목표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통합통계측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 SDGs 지표 간 통합 분석, 다양한 영역으로부터의 지표 간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접근법에 대한 제언이 요구된다.
  - 목표2: 국가통계시스템은 지속가능발전 문제에 관한 통합 분석을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일관적인 방법으로 연계하여 통계를 생산한다 → 새로운 데이터 사용에 관한 실무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
- ▶ **통계 비즈니스 과정의 현대화:** 이 영역은 2030 의제 이행을 위해서 진행되는 국가통계시스템 변화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데이터와 정보 관리뿐 아니라 통계 및 기술 인프라 모두가 포함된다. 이는 앞선 ③번과 ④번 영역 즉, 통계 품질관리와 데이터 출처의 통합을 용이하게 한다. 통계 비즈니스 과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종합통계비즈니스프로세스모형(Generic Statistical Business Process Model, GSBPM), 통계기관을 위한 종합활동모형(Generic Activity Model for Statistical Organizations, GAMS0), 종합통계정보모형(Generic Statistical Information Model, GSIM), 공동통계생산아키텍처(Common Statistical Production Architecture, CSPA), 데이터기록화기관(Data Documentation Initiative, DDI), 통계데이터와 메타데이터 교환(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 SDMX) 등의 모델이 개발되어 있다.
- 목표1: 국가통계시스템은 최근 비즈니스 과정을 계획하는데 GSBPM을 이용하며, 그 결과를 통해 변화의 기회와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 GSBPM을 사용하는 국가통계시스템 사례 수집, 국가수준에서의 GSBPM 활용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지원한다.

- 목표2: 국가통계시스템은 통계의 품질, 효율성, 통계정보 관리와 교환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SDMX 등의 현대화 방안을 시행한다 → SDMX를 적용하는 국가 통계시스템 사례 수집 등이 필요하다.
- ▶ **적합한 기술의 보유:** 최근 국가통계기관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인적자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030 의제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데이터 관리, 교류, 조정,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마이닝 관련 전문기술 등이다. 최근에는 통합적인 정책 분석을 위한 통계 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다분야 전문지식의 필요성이 논제에 추가되고 있다.
- 목표1: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통계는 적절한 가이던스와 훈련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2030 의제 성취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 리더십·변화관리·조직 발전을 위한 훈련 자료와 커리큘럼 등이 요구된다.
- 목표2: 국가통계시스템 직원들이 갖춘 기술은 국가발전계획과 2030 의제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통계 생산과 지속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 인적자원관리 매뉴얼, 업무분장별 스태프에게 요구되는 역량, 다출처자료 활용에 관한 훈련 및 프로그램 매뉴얼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동비전 및 행동계획의 이행 조정역할은 지역 사무국(The Bureau)에서 맡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범분야 및 다양한 제도적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고위실무그룹 대표가 5개 분야 내에서 달성할 목표를 향한 조정된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태지역의 경제통계의 증진을 위한 고위실무그룹(Steering Group for the Improvement of Economic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아태지역 주민등록과 인구통계를 위한 지역별 고위실무그룹(Regional Steering Group for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아태지역 재난관련 통계에 관한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Disaster-related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아태지역 농업통계에 관한 지역별 고위실무그룹(Regional Steering Group on Agricultural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아태지역 통계교육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Training in Asia and the Pacific), 아태지역 통계 파트너(Partners for Statistics Development in Asia-Pacific) 등이 포함된다. 이외,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과 같은 하위지역 그룹은 공동비전과 행동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비전과 행동계획은 효과적으로 하위지역 통계개발 전략을 지원하고, 또한 글로벌 액션플랜의 아태지역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사무국은 프레임워크 검토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 회원국과 파트너들의

응답부담 가능성과 자원의 수요 등을 파악해야 한다. 프레임워크에는 SDGs 세부목표와 지표 관련 통계활동, 현 활동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목표들, 각종 지역 통계 프로그램 경험, PARIS21(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및 세계은행 등에서 진행하는 활동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SDGs 세부목표 17.18 및 17.19에 맞게 설계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2030 의제의 검토와 후속 조치에서 지역위원회와 위원회 조직 내 분야 포럼은 이 두 세부목표의 검토과정이 될 것이다.

모니터링의 결과는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검토해야 한다. APFSD는 통계개발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될 것이며, 특히 사용자와 생산자 간의 대화를 강화하여 국가통계시스템이 정책의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는데 활용될 것이다.

## 2) UNECE의 통계로드맵

유럽통계전문가컨퍼런스(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CES)는 2015년 ‘SDGs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s, NSO) 역할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그 해 10월, SDGs 통계 조정그룹(Steering Group on Statistics for SDGs)을 발족하여 SDGs 이행을 위한 통계 로드맵 작업에 착수하였다.<sup>6)</sup> 로드맵은 SDGs 이행과정에서 NSO의 역할과 CES의 향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NSO의 역할은 ①협업 메커니즘 구축, ②글로벌지표에 대한 데이터 준비 상황 평가, ③지역, 국가 및 지방 지표 개발, ④글로벌지표에 대한 데이터 제공, ⑤통계 역량 구축, ⑥SDGs 통계 커뮤니케이션 구축 등 총 6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소통하고 조율하는 NSO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6) CES는 UNECE 역내 국가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내 통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3년 발족되었다. 여기에는 UNECE 56개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및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몽골 등 그 밖의 일부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60개국 이상의 통계기관장과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UNECE에 역내 국가의 통계개발 수요에 대해 자문하고,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른 통계 및 방법론을 개발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통계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2015년 10월 발족한 SDGs 통계 조정그룹에는 스위스와 미국을 의장국으로,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몰디브, 러시아, 스웨덴, 터키, 영국, 유럽통계청(Eurostat), OECD, UNECE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 가) 협업 메커니즘 구축

2030 의제에 따르면, 글로벌지표는 국가통계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에 기반하며 모든 후속조치와 검토는 고품질의 접근가능하고, 시의적절하며 신뢰할만한 세분화된 데이터에 기반하여야 한다. 이에 NSO는 기본적으로 SDGs 지표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의 출처(source)와 방법론을 파악하는 포컬 포인트(focal point)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SDGs 이행 진전도는 통계와 정책 담당자 간 긴밀한 협업 하에 모니터링되어야 하므로 NSO는 국가 차원에서 SDGs 이행 계획을 세우고, 지표체계를 만드는 일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지표를 선정하고 통계 생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NSO의 역할과 범위를 결정하는 일은 국가통계시스템과 기존의 법,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NSO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NSO가 통계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CES 선언문에서는 ‘SDGs 측정과 모니터링에서 NSO의 조정 역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NSO는 통계조정기구로서, SDGs 통계적 지표(statistical indicators) 측정 관련 국제 표준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계, 비즈니스,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 데이터 사용자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포럼을 조성하고, 주제별 워킹 그룹 등을 통해 SDGs 측정과 관련 이슈를 토론해야 한다.

### 나) 글로벌지표에 대한 데이터 준비 상황 평가

2030 의제에 따르면, 후속조치와 검토 과정은 기존의 플랫폼과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국가의 상황과 역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보고(reporting)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NSO는 우선 SDGs 지표를 통계적 지표와 비통계적 지표<sup>7)</sup>로 구분하고, 통계적 지표에 초점을 두어 데이터 보유기관과 출처, 가용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통계품질과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통계시스템 영역 밖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가용성 평가 시, 개별 지표에 대한 관련 정부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다) 지역, 국가 및 지방지표 개발

SDGs를 국가 및 지방 차원의 행동으로 전환시키고, 국가 전략 및 정책과 통합하는 일은 SDGs 달성에서 중요한 일이다. 글로벌지표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목표 측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표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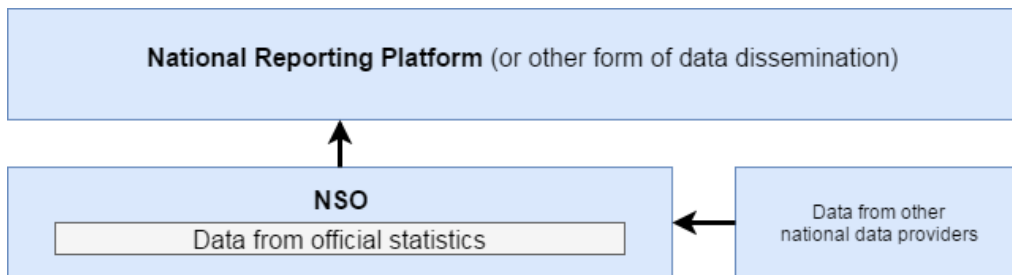
7) 비통계적 지표(non-statistical indicators): 국가 수준에서 예/아니오로 응답한 결과를 취합한 지표 혹은 정책이나 전략의 질적 평가에 관한 지표를 의미

달라진다. 국가 지표에 대한 수요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발생하지만 지표 선정 및 측정은 기존의 체계와 절차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가통계시스템 내에서 NSO와 협업하여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통계청은 기존 통계 및 EU의 정책의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SDGs 17개 목표를 반영한 EU SDGs 지표를 개발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또한 글로벌지표에 부합하는 데이터 부재 시, 국가의 통계발전수준에 따라 대체 지표를 사용하여 현 지표체계의 결함을 국가 지표로 보완한다. 국가 지표를 결정할 때는 사회·경제·환경 영역 간 지표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통계시스템 내에서 정립되고 합의된 표준 방법론에 따라 생산가능한 지표를 우선으로 하며, 국제기구가 생산할 수 있는 지표, 특히 질적 지표를 고려하여 중복적인 생산을 피함으로써 국가통계시스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 글로벌지표에 대한 데이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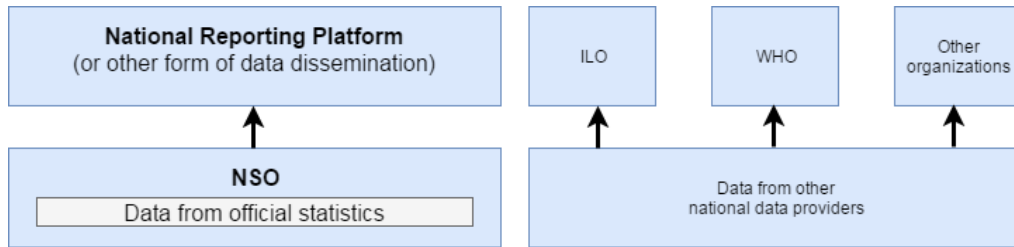
데이터 흐름(flow)에 관해서는 2017년 4월에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이행 절차 및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일부 국가는 SDGs 지표에 대한 국가보고플랫폼(National Reporting Platform, NRP)을 개발 중이며, 향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되고 있는 플랫폼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RP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용자에게 SDGs 관련 통계 정보를 서비스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수준에서 데이터 흐름 모델은 국가통계시스템(집중형 vs 분산형)에 따라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다.<sup>8)</sup>



[그림 2-2] 모형1: NSO가 모든 지표에 대해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하는 경우

8) 각국의 통계제도는 국가정책에 필요한 대부분의 통계를 통계청이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는 집중형과 주요 통계는 통계청이 하지만 각 기관의 고유업무수행을 위한 통계는 개별기관 책임 아래 작성하는 분산형으로 분류된다. 물론 두 제도 간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집중형과 분산형은 스펙트럼의 양극단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림 2-3] 모형2: NSO와 그 외 데이터 생산기관이 각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모형1은 NSO가 지표 관련 모든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 수집, 제공하는 모델이며, 국제기구를 비롯해 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에서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감으로써 (pull), 국가의 데이터 보고 부담을 경감하고, 데이터의 투명한 보고와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NSO가 데이터 관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 모형2는 NSO가 SDGs 지표와 직접 관련되는 통계만 책임을 지며, 나머지는 해당 지표 생산 기관의 책임하에 두는 것이다. 이는 SDGs 지표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기존에 국제기구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나의 표준적인 데이터 흐름 모델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NRP와 국제기구에 중복적으로 데이터가 제공되는 흐름을 피하면서 국가통계시스템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자료원에 대한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MDGs 시대에는 MDGs 통계 생산을 위해 때로는 NSO가 알지 못하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국가가 창출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결과 국가 통계가 MDGs의 측정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흐름의 과정에서 이중 보고를 피하고, 국제기구에서 공표하는 데이터 수치에 대한 검증 등 실질적인 품질관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마) 통계역량 구축

국가 수준에서의 통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에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는 일이며, 그 전제조건은 앞서 언급한 SDGs 지표에 대한 데이터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일이다. 지표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데이터 생산에 요구되는 시간, 자원 등도 평가해야 하며, 이 평가는 시기(단기, 중기, 장기)별로 생산 가능한 지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을 포함한다. 이후에는 유사한 수요(needs)가 있는 국가를 파악하여 그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조달, 파트너십을 조성했는지를 참고하여 자국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바) SDGs 통계 커뮤니케이션

NSO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담당자와의 소통과 이들을 프로세스 내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NSO가 독립적이며 믿을 만한 고품질의 통계 제공자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최근에는 빅데이터 등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지표 측정에 활용 혹은 제한하는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NSO는 이해당사자들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SDGs 프로세스의 이해 증진을 위해 정책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원칙과 전략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 제3절 국가별 SDGs 이행 준비 현황\_NSO를 중심으로

### 1. 종합분석

#### 가. OECD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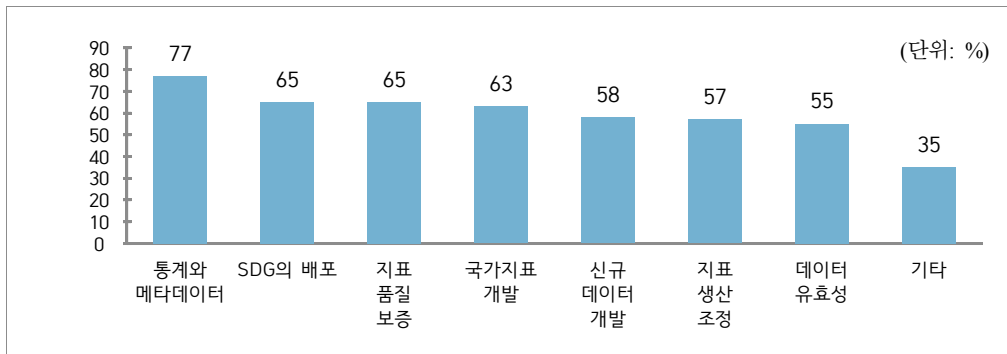
SDGs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국은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UN이 매년 HLPF를 통해서 자발적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는데, 2016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22개국, 2017년에는 43개국이 참여하였다. 이와 별도로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는 개별 국가의 SDGs 이행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분석들을 시도하고 있다. OECD의 경우, 2016년 7월 OECD 국가 및 파트너 국가 43개국을 대상으로 SDGs 이행 지원을 위해 거버넌스 메커니즘과 이행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OECD, 2016).

응답한 32개국 결과를 종합해 보면 SDGs 총괄조정기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보인다. 하나는 대통령 혹은 총리실이 주관하는 경우, 대통령 혹은 총리실과 개별 부처(외교부 등)가 협업하는 경우, 별도의 총괄기관을 설치하여 개별 부처 혹은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이다. 주목해 볼 점은 SDGs 모니터링과 지표 개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6)(<부록> 참고).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SDGs를 국가발전계획의 일부로 채택하여 이를 법체계에 편입하기도 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휘를 담당하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및 시민 사회도 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PFSD, 2015).

## 나. UNECE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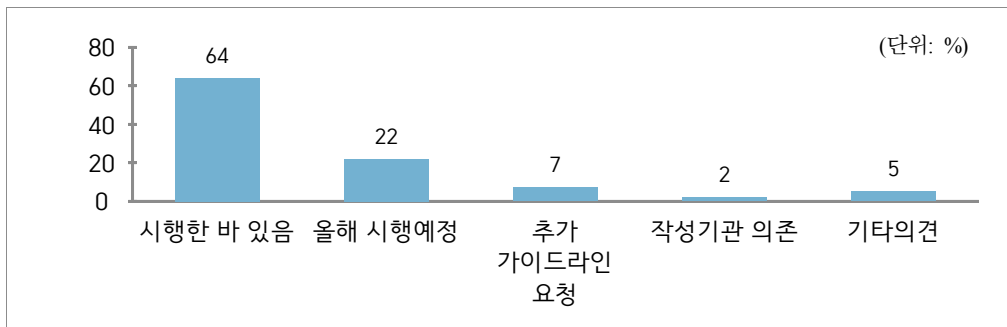
UNECE는 CES는 로드맵 작성을 위해 역내 및 OECD 회원국 등 70개국을 대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NSO의 전략과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61개국이 응답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SDGs 지표에 대해 NSO는 어떤 책임이 있나?** 전체 61개 응답 국가의 77%인 46개국에서 통계청이 SDGs 관련 통계와 메타데이터를 생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65%는 통계 보급과 커뮤니케이션, 통계품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 **SDGs와 관련하여 NSO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있었나?** 전체 59개 응답 국가의 24%인 14개국만이 SDGs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계청의 역할이 정해졌으며, 29%인 17개국은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했고, 31%인 18개국은 이는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 통계청의 일반적인 역할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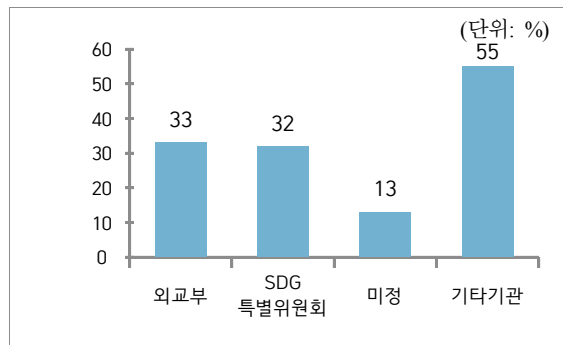
- ▶ **SDGs 글로벌지표 측정을 위한 자국의 통계역량을 평가하였나?** 전체 59개 응답 국가의 64%인 38개국은 통계역량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2%인 13개국에서는 연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국가들은 UN 또는 정부로부터 추가 지침을 기다리거나,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국가 계획에 따른 SDGs 지표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 중인가?** 전체 59개 응답 국가의 68%인 40개국은 SDGs 국가지표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 **SDGs 글로벌지표에 대한 보고 플랫폼을 준비 중인가?** 전체 60개 응답 국가 중 31%인 18개국만이 플랫폼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국가는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14%)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절반 이상(55%)은 아직 미정이라고 응답하여, 아직까지 많은 국가가 여전히 자국에 적합한 보고 매커니즘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적 수준에서 SDGs 총괄, 조정은 누가 담당하는가?** 60개 응답 국가의 33%는 외교부에서, 32%는 별도의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타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12개국), 재정부(8개국), 개발부(5개국)라는 응답이 있었다.



▶ **SDGs 총괄 조정기구와 NSO는 어떻게 협업하는가?** 전체 60개 응답 국가의 45%는 NSO가 SDGs 조정기관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협업하고 있으며, 38%는 NSO가 정치적 조정기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NSO는 그 외 이해당사자(연구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통계생산 및 사용자)와 협업하고 있는가?** 60개 응답국가 중 39개국이 통계 생산자로서 연구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업하고 있으며, 31개국은 데이터 사용자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2. 국별 사례

SDGs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글로벌지표 체계가 갖추어짐에 따라, 각 국 통계청은 지표 대응을 위해 자국의 통계 가용성을 평가하고, 데이터 보고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여기서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과 아태지역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행 준비를 하고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통계청을 중심으로 그 준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미국

미국은 통계시스템을 분권화하여, 125개 이상 연방의 통계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SDG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대중이 SDGs 글로벌 지표와 관련 국가 통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NRP를 만들어 통계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http://sdg.data.gov>, 2016년 9월 개설). 이 플랫폼의 특징은 다른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극대화하여, 국제기구 통계와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월 기준 티어1, 2에 해당하는 62%의 지표에 대해 공식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나. 영국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은 영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보고를 위해 다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관련 기관이 SDGs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 일반 대중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정부는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국가차원의 세부목표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 지표를 개발한다. 셋째, 세분화된 데이터 보고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 소스와 방법을 탐색, 개발한다.

현재는 자국과 관련된 글로벌 세부목표(target)를 파악하기 위한 두 가지 연구를 진행 중인데, 하나는 정부 부처로 하여금 현재 부처의 계획과 관련된 세부목표를 파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단체가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세부목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글로벌지표가 영국과 관련한 SDGs 목표의 진전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관련이 없는 경우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해당사자협의체(UK Stakeholde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KSSD)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ONS는 SDGs 이행 진전 보고서를 매년 발표 하며, 데이터 갭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다. 독일

독일정부는 2002년 첫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NSDS)을 발표하였다. 이후 4년마다 이행 상황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전략을 개편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인터넷과 공청회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100여 개의 기관, 개인 등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수립된 미래를 위한 헌장(Charter for the Future)은 시민사회 주체들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박정호 외, 2017). 또한 2년마다 통계청은 목표 달성에 대한 진전을 보여주는 독립적인 지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 라.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SDGs 이행 준비 상황을 평가한 초기 국가들 중 하나로, 네덜란드 통계청(Statistics Netherlands)은 2016년 11월, 글로벌지표에 대한 통계 가용성 및 자국의 맥락에 맞는 지표들을 담은 ‘Measuring the SDGs: An Initial Picture for the Netherland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네덜란드는 글로벌지표의 37%에 해당하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그 수준을 50%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마. 스위스

스위스는 SDGs 이행을 측정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인 MONET을 2003년부터 활용해왔다.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75개의 지표가 있으며, SDGs를 반영하여 프레임워크를 수정, 국내 및 글로벌 보고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6~17년을 전환기로 삼아 SDGs 관련 세부목표를 자국의 맥락에 맞게 해석(translating)하고, 기존 MONET 시스템을 확장하여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계청은 2030 의제 작업의 가장 초창기부터 통계 전문가들이 국가적 맥락에서 세부목표를 해석하고, 문서화, 체계화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정부 기관과 협업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바. 핀란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핀란드의 노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2년 Rio회의 이후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들이 시작,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기존의 노력들에 SDGs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박정호 외, 2017). 이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4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약속(The Finland We Want by 2050, Societ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합의문과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8개 조항의 사회적 약속을 개편하여 SDGs 원칙들과 연계, 조율하였다.

현재는 8개 조항의 사회적 약속의 이행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39개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가 Findicator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통계, 정책 담당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표 네트워크를 통해 SDGs를 반영한 지표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다.

## 사. 폴란드

폴란드 통계청은 기존의 국가 발전전략 중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과제를 기초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제안하였다. 2030 의제 채택에 따라, 기존의 지표체계를 SDGs에 맞춰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지표 플랫폼을 확장하여 SDGs와 매핑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청은 SDGs 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적 조율은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가 맡아서 수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2030 의제를 참조로 2017년 2월 채택된 전략(Strategy for Responsible Development, SOR)과 SDGs 목표를 매핑하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 아. 러시아

2016년 러시아 통계청은 외교부와 함께 SDGs 지표 관련 통계 가용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대리지표(proxy)를 포함하여 100여 개 정도가 산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련 통계 생산기관은 25개 주요 연방 기구들에 분산되어 있어 정치적 차원의 조율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통계청이 SDGs 관련 데이터 보고 체계를 조정하라는 UN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통계청을 SDGs 지표와 관련한 통계를 취합하여 국제기구에 보고하는 조정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관련 통계는 정부가 승인한 통계업무계획(Plan of Statistical Work)에 따라 작성되며, SDGs 지표 이행 이슈는 대통령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부처 간 실무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on climate change iss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WG) 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러시아 통계청은 2017년 IWG 후원으로 SDGs 이행 관련 통계 업무 가이드를 담은 통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존의 통계정보시스템을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 모니터링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국가보고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 자. 태국

태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개발(Developing Information System) 관련 하위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통계청이 수행하며 현재 8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통계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은 ①SDG- 지표에 대한 국내 맥락화 ②모니터링 위한 데이터 구축, ③국가 SDGs 글로벌지표와의 정합성 분석 ④데이터 평가 매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다.

## 차.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7월, SDGs 관련 대통령 규정(President Regulation on SDGs)을 제정하여 국내 이행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통령 규정을 법적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획부(National Planning Ministry)에서 대부분의 SDGs 지표를 국가 중기 발전계획에 통합하여 정부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해 정부와 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SDGs 지표 관리의 책임기관으로써 관련 통계의 개선,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제4절 국내 SDGs 이행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1. 각 주체별 SDGs 이행 현황

한국의 SDGs 전략 수립 및 이행은 현재 총괄 이행체계의 부재로 인해 답보 상태이다. 다만, 개별 이행주체별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수준이며, 그 정도는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여기에서는 주요 주체별 SDGs 이행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중앙정부

한국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 대통령 자문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가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심의·조정·평가 활동 등이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sup>9)</sup> 이후 2006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이 발표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되며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었다.<sup>10)</sup> 현재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를 근거로 수립·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1년 제2차, 2016년 제3차

- 9) 이 흐름을 SDGs와 구분하여 SD(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과 능력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당초 환경 중심 이슈에서 사회·경제 이슈로 논의의 범위가 확장되어 환경·경제·사회 통합과 균형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개념적 발전을 거쳐 2012년 6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Rio+20)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인 SDGs 수립에 합의하였고, 2014년 9월 유엔총회에서 공개작업반이 제안한 SDGs가 Post-2015 개발의제의 주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유엔총회는 MDGs의 만료에 따라 새로운 발전의제로 SDGs를 채택하였다.
- 10)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대통령령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법률상 위원회로 새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 기본법 제15조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며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또한 지속가능발전법의 주요 내용들은 변경되거나 새로운 법률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대체되어 사실상 이전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은 제15조에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률상의 지위변화로 인하여 대통령 소속이었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로 지위가 변경되었다(김태균 외, 2016).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6년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은 SDGs를 일부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은 환경 관련법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SDGs의 기본 취지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김태균 외, 2016; 김석호 외, 2016; 시민넷, 2017). 이에 중앙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적인 한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별 부처 단위에서 SDGs 세부목표의 국내 정합성, 지표 분석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SDGs 관련 국내의 주요 이행 주체는 환경부, 외교부, 통계청이다.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근거로 하여 국내이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외교부는 유엔 협상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SDGs가 채택되기까지 공식적인 대외 창구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 유엔의 국별 이행점검 기구인 HLPF의 담당기구로 지정되어 있다. 통계청은 글로벌지표와 관련한 국내 통계 가용 정도를 파악하고, 국제기구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외 개별 부처는 SDGs 관련 소관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산림청은 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UN SDGs의 산림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산림분야 SDGs 이행점검 및 성과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은 각 소관목표와 관련된 지표 등을 점검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SDGs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는 상호연결되어 있어 시너지(synergy) 및 상쇄효과(trade-off)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별 부처 단위에서 설정된 목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 정책들을 SDGs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통합적인 이행체계 내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난 20년 동안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1990년 9월, 약 200개 도시의 지도자들이 뉴욕에 모여 창설한 이클레이(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ICLEI)(Zimmerman, 2014), 국내적으로는 지방의제21운동으로부터 의미있는 활동이 시작되었다.

지방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의 결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리우선언과 함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인 의제21(Agenda21)을 채택

하였다.<sup>11)</sup>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지역행동 계획이다.<sup>12)</sup> 구체적으로 의제21의 제28장에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가 지역차원의 행동인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에서 의제21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의제21로 정착되었으며 특히 후자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운동의 결합으로 이어졌다. 지방의제21 운동은, 1995년 부산광역시를 시발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sup>13)</sup> 2000년 당시, 약 85%의 지방정부가 ‘지방의제21’을 수립했고, 이 중 33%의 지방정부는 지방의제21을 이행할 거버넌스 기구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지방의제21 전국 협의회가 출범하였다. 2016년 현재, 약 90%에 달하는 지방정부가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그 중 50%는 전담 실무조직을 갖춘 민관협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넷, 2017).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나온 지방의제21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제21을 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약 53%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공무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포럼, 캠페인 활동이 많았다. 또한, 사회 및 경제분야보다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의제 실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법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방의제21 실천이 불균형적으로 추진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이다 (시민넷, 2017).

2015년 이후 지방의제21 운동은 지속가능발전 운동의 2단계인 ‘지방 SDGs 운동’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선도적인 지역으로는 서울, 광주, 경기도, 안산, 수원, 원주, 아산, 전주 등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SDGs를 기반으로 재정립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협회의가 기존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기획예산과 등 기획 및 조정부서로 옮겨지고 있는 경향이다. 동시에 정책이행정도를 평가한 지방 SDGs 지표 등도 개발하고 있다(시민넷, 2017).

11) 의제21은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12) 지방의제21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있지만, ICLEI의 정의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지방의제21이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심사들을 처리하는 장기적, 전략적 행동계획의 준비와 실행을 통해, 지방수준에서 의제21의 목표들을 성취하는 참여적, 다부문적 프로세스이다.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남유럽 국가 일부에서는 지방의제21이라 불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도시 지속가능발전 혹은 지방 지속가능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 명칭이 어떻든 간에 지방의제21은 세계 각지의 수천 장소에서 시행 중이다 (Zimmerman, 2014).

13) 이것은 1992년 리우회의에 참여한 지역 시민사회활동가들이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동으로 국내에 소개하면서 촉발되었다.

## 다. 국회

SDGs 성격상 본 의제들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협의체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적격이라 볼 수 있는데 반해 법률상 지위가 환경부 소속이어서 현재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환경부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SDGs를 소화할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김태균 외, 2016)는 점을 이미 앞서 언급한 적이 있다. SDGs를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더불어 민주당 송옥주 의원('17.7.26.)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으로의 지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발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안 제3조)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미를 기존의 환경보전 중심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고 있다. 또한 환경·경제·사회 분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완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으로써 의사결정구조에서 SDGs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후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으로써 지표체계 및 근거기반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SDG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단일화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개별 부처에 소속되지 않고 모든 부처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 라. 시민단체

SDGs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지방의제21과 맥을 같이한다. 1992년 리우회의 이래로 시민단체와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의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들여 지방의제21을 시행하고 조직을 강화시켜왔다(김희강, 2012).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SDGs에 대한 시민사회의 오너십 확장으로 이어진다(HLPF, 2016). Post-2015 의제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2013년 초 국제개발협력분야의 3개 협의체(KoFID, KCOC, GCAP-Korea) 중심으로 Beyond 2015-Korea와 action/2015-Korea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내 및 국제적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역량강화를 위한 문서강독, 내부워크숍, 정부와의 정책대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의 개발협력분야 협의체의 네트워크인 Asia Development Alliance(ADA) 창립을 주도하였다(이성훈, 2016).

시민단체의 역할은 2016년 7월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자발적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확대되었다. 2016년 한국은 유엔 HLPF 국별 리뷰 검토 대상 국가였으며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자발적보고서가 마련되었다. 당시 시민사회는 9개 시민단체 및 전국네트워크 조직이 모여 2016년 6~8월까지 한시적으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 시민넷, Korea SDGs Network)’를 결성하여 국가자발적보고서에 대응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총 21개 단체를 회원으로 시민넷은 공식적인 활동을 진행 중이다.<sup>14)</sup> 이 그룹의 활동목적은 우리나라 SDGs 및 지표수립과 이행을 위한 주요 그룹 및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SDGs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SDGs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사회의 SDGs 정책역량 강화 및 참여단체 간 정보교류 및 활동협력이다(www.kicsd.re.kr). 특히 SDGs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가 갖는 의의가 크다. 정부가 제출하는 자발적 국가보고서의 경우, 2030년까지 최소 2회 작성 및 제출이 권고된 상황이다. 반면 시민넷에서는 매년 HLPF 주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발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SDGs 이행점검이 실시된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기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4월 시민사회는 ‘빈곤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변영’이라는 제목 하에 2017년 HLPF 대응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시민사회 보고서에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5개 SDGs를 중심(목표1, 목표5, 목표9, 목표14, 목표17)으로 글로벌 세부목표 및 지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적절성, 유효성,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 국내 현장 이슈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수립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시민넷, 2017).

14) 경기여성단체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연합,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열린네트워크,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한국공정 무역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전화,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인권재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 운동연합

## 마. 기업

다국적기업들의 영향력이 더 커짐에 따라, 그들은 빈곤퇴치, 발전,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국제적 정책 토론에서 고려해야 할 행위자가 되고 있다.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관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기업측 행위자의 역할이 증대되는 경향은 UN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약속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다중 이해당사자가 관여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의 개념을 인정했다”(Pingeot, 2014).<sup>15)</sup>

UN 전 사무총장 코피아난이 발족시킨 자발적 기업 책임기구인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를 통해 기업이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DGs와 관련해서는 2012년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를 자문하도록 2012년 7월 고위급패널(High Level Panel, HLP)과 기술조사와 정책입안 간의 간극을 극복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또한 UN의 다른 기구들 및 기관들이 협력하도록 2012년 8월 지속가능발전해결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에서 활동하였다(Pingeot, 2014).

국내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SDGs 활동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및 지속가능경영원 그리고 UN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의 한국협력기구이다. 2000년 6월 전경련에서 선포한 환경경영헌장을 구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동참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2년에 출범하였다. WBCSD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요청으로 지속가능발전산업계 국제단체로 BCSD(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립하였고, 1995년 BCSD와 국제상공회의소가 설립한 세계친환경산업협의체와의 합병하였다.<sup>16)</sup> 기업은 UN 협력단체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침에 따라서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환경적, 사회적 성과 및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현재 제도적인 강제성보다 경영전략 및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김갑래, 2013).

15) 유엔과 기업 행위자 간 늘어나는 상호작용의 정통성과 효율성에 관한 견해는 각국 정부들, 유엔의 기구들, 시민사회마다 다양하다. 이 새로운 모델의 대안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관민협력과 여러 이해당사자가 관여하는 이니셔티브와 연관된 위협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견해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유엔에 대한 기업의 영향이 환경, 사회,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UN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UN의 신용과 정통성을 위협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거대한 다국적기업들은 유엔의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또 그 의제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의 문건들은 물론이고 업계 기구들이 작성한 일련의 보고서에서 지적한다(Pingeot, 2014).

16) 관련 홈페이지 인용(2017. 8.1 접속)

지속가능경영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조직으로 2012년부터 국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국내외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UN SDGs 대응’→‘신기후 체제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공급망 관리’→‘공유가치창출’→‘윤리경영 고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는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의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관심이 제일 높았던 분야는 ‘신기후체제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인 반면, 외부 전문가들은 ‘UN SDGs 대응’을 꼽았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국제 사회와 각국 정부가 기업이 시급한 사회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요구는 향후 점점 더 커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영향력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지속가능경영원, 2016).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구는 UN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이다. 이 기구는 MDGs나 SDGs와 같은 글로벌 발전의제와 양립할 수 있는 지역비즈니스 관행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2016년 기준, 28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DGs 이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업활동에 매진하고 있다(HLPF, 2016). UN글로벌콤팩트는 UN이 콤팩트라는 이름으로 공공-민간파트너십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파트너십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개념이 매개되어 있다(여현덕·박정민,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파트너십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참여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SDGs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주요 인구집단별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슈발굴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통계 분야의 SDGs 이행 현황과 문제점

아직까지 국가 전체 차원의 총괄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통계청의 역할 또한 명확하지 않으나, 앞서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NSO는 자국의 SDGs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써 SDGs 지표 관련 데이터 및 통계에 대한 조정역할을 UN으로부터 권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및 통계역량 강화 부분은 UN통계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맡고 있으며, 동 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UN통계국(Statistical Division)의 의사소통 채널이 NSO이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한국 통계청은 SDGs 채택 이후 글로벌지표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해당 내용을 국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다. 통계청은 SDGs

글로벌지표 수립 초기 단계인 2014년 말부터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과정에 참여해왔다. IAEG-SDGs 참관국(observer)으로, 모든 국가 및 국제기구, 이해당사자에게 열려있는 의견수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00여 개의 지표 초안 리스트부터 2017년 3월 최종 232개 지표리스트가 확정되기까지 국내 관련 부처 의견을 취합,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분산형 통계 시스템인 한국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대부분의 소관 통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취합된 국가의 의견은 ‘측정가능성 및 데이터 제공가능성’을 결정하므로, 이후의 지표선정 및 통계역량강화 활동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SDGs 글로벌지표가 2016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선언된 이후, 통계청은 SDGs 글로벌지표에 대해 국내 데이터 가용성을 분석하고, 데이터가 가용한 지표를 중심으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작업을 학계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2016). 또한 국내 유사지표 체계 및 서비스 방안 등을 검토(2017)하는 등 국가지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SDGs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타 부처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당시만 해도 SDGs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지표 또한 부처 소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지표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응답률이 저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응답을 강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계속해서 언급해왔듯이, 현재 SDGs 업무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이다. 그러나, 동법 하에서 지표에 대한 통계청의 역할은 명시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SDGs 지표 관련 공식적인 채널은 통계청이고 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법적 근거없이는 업무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째, 해당 부처 내 SDGs 대응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SDGs는 UN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국제 업무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내 이행문제가 되면 정책부서가 연관된다. 지표 혹은 통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정책 부서에서 직접 응답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셋째, 통계와 정책의 괴리현상이다. SDGs에서 통계의 역할은 목표 이행을 위한 점검 수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반영하는 지표의 개발과 정책의 평가, 그로 인한 정책의 개선 및 개발이라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총괄적인 SDGs의 목표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지표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정책과 통계의 연결고리가 취약한 상황이다. 앞서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자국의 전략 마련 시, 이를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지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국가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은 전략 수립부터 지표 선정에 이르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과 통계의 간극을 줄이고 있다.

## 제5절 SDGs 통계 조정체계 구축 방안

### 1. SDGs에서 통계의 중요성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정도는 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이는 통계가 증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과 책무성(accountability)의 토대로서 SDGs 이행을 위한 중요한 축이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UNSC, 2015).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합한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면 효과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IEAG-DR, 2014).

MDGs 이행과정에서 ‘데이터’ 한계로 인해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SDGs에서는 그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지금까지 국제회의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논의된 적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SDGs가 데이터 및 통계의 역할을 세부목표 및 지표로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데이터 및 통계가 이행수단인 동시에 정책목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미 국제기구의 많은 사업들이 SDGs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의 경우 기존 프로젝트와 SDGs와의 조화(harmonization)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더 나은 삶 지수(The Better Life Index)와 SDGs 지표와의 맵핑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SDG 목표와 현재 상태와의 거리 분석을 실시하여 회원국 정책 컨설팅 등을 하고 있기도 하다(OECD, 2017). 특히, IAEG-SDGs는 232개 글로벌지표에 대해서 국제기구를 관리기구로 두어 지표 개발 및 자료 관리의 책임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SDGs를 핵심업무로 가져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를 파트너로 하고 있는 국가 내 개별 부처에서도 SDGs가 업무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 혹은 통계청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여기에서는 통계청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겠다.

### 2. SDGs 이행과정에서 통계청의 역할

SDGs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거버넌스가 아직 온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계청의 역할에 대해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해외사례에서 보듯 SDGs



시대에 대비하는 이행 준비단계에서부터 통계청의 역할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즉 SDGs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성과가 정확한 지표의 해석과 해당 통계의 가용성 평가, 측정, 공표에 있기 때문에 통계청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가를 고민하는 것은 모든 통계인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김석호 외, 2016).

SDGs 이행 과정에서 통계청의 역할은 크게 국가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모니터링, 통계역량강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 내 통계 조정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역할들이 제시될 수 있다. ①SDGs 글로벌지표의 준비상황 평가, ②SDGs 국가지표 개발, ③국제기구 자료 제공, ④지표 서비스, ⑤지표 보고서 작성이다.

## 가. 국가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모니터링 관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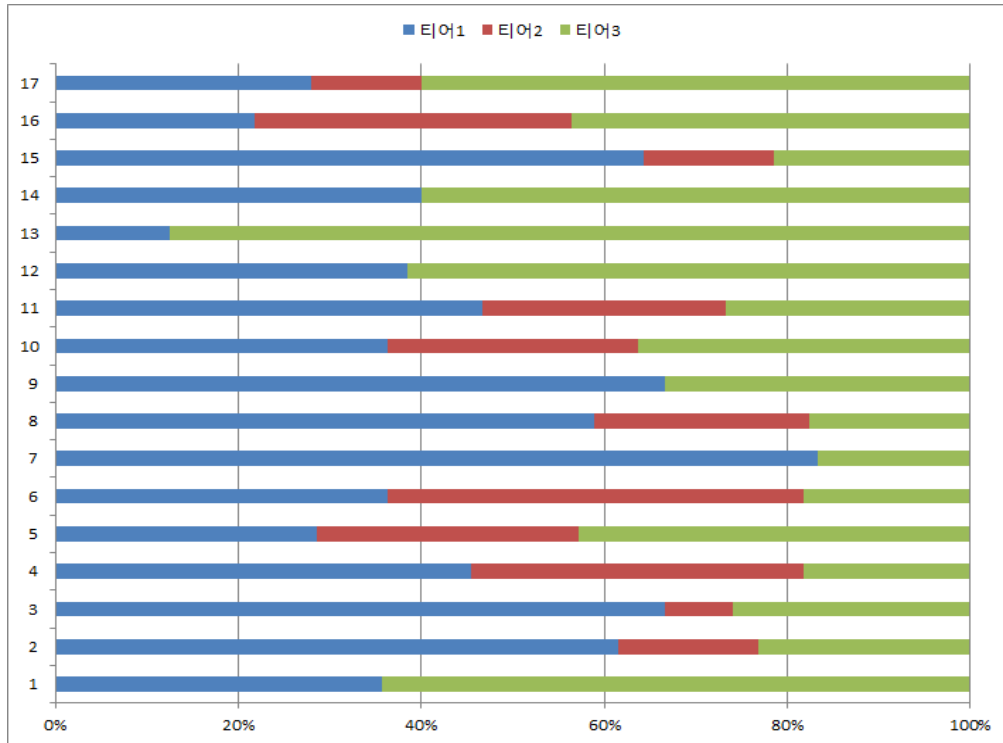
### 1) SDGs 글로벌지표의 준비상황 평가

앞서 보았듯이, IAEG-SDGs는 데이터 가용성 및 방법론 존재 여부에 따라서 지표를 세 층위로 구분하고 있다. 통계청 또한 이 기준에 준용해서 지표 작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2017년 3월 기준으로 232개 지표 중 45%(104개)가 현재 국내 데이터 및 통계로 산출이 가능하였으며(티어1), 16%(38개)가 지표 산출을 위해서 새로운 조사 및 항목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티어2). 그리고 지표 정의가 모호하거나 한국 상황과 무관한 경우가 39%(90개)로 분석되었다(티어3).

글로벌 수준에서의 SDGs 이행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가에서 해당 지표를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국제기구와 함께 티어 2와 3에 속하는 지표의 데이터 가용성과 측정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티어 현황을 SDGs 목표별로 분석하여 현재 가용한 데이터가 확보된 영역과 향후 통계의 개선 개발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그림 2-4]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티어3의 비중이 환경(목표13, 14, 15 등) 및 거버넌스(목표16) 관련 목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티어1의 비중은 일자리 및 산업화와 관련된 목표8에서 높았는데, 이는 GDP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분야 통계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환경 분야 통계개발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2) SDG 국가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했던 MDGs와 달리 SDGs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보편성은 지표 개발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지표를 가만히



[그림 2-4] 글로벌지표의 국내 티어 분류 잠정 현황

보면, 특정 지표의 경우 개발도상국 혹은 선진국 등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단일 국가에 232개 지표가 모두 적합한 경우는 없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지표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UN 결의문에서는 통계위원회에서 채택한 글로벌지표는 국가 및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되는 지표들에 의해 보완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역은 특수한 상황 및 역량, 발전수준 등에 따라서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한국 또한 앞서 보았듯이 티어3에 속하는 39%의 지표 중에는 한국 상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미 성취했다고 판단되는 지표들이 있다. 어떠한 경우에는 한국적 맥락에는 중요하나 글로벌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SDGs 이행전략과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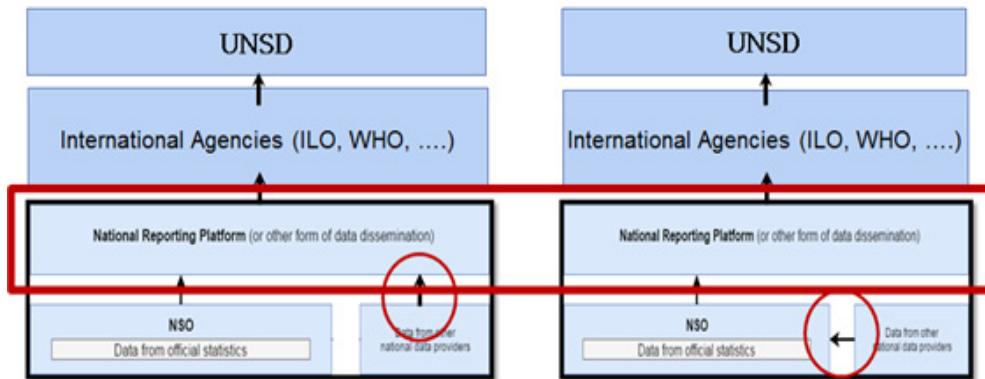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국가 부담을 최소화한 국가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은 글로벌지표의 검토와 국내 유사지표체계의 검토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부목표와 연관되는 지표 풀(Pool)을 개발하는 것이 통계청의 역할이며, 최종 지표 선정은 SDGs 국가 거버넌스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3) 데이터 보고 체계 마련

SDGs 이행 평가는 개별 국가단위에서 제공한 데이터 및 통계에 근거한다. 따라서, 각 국가는 양질의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IAEG-SDGs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지표의 관리기관(custodian agency)으로 지정된 국제기구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표1.1.1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담당한다. 국제기구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비교를 위한 표준화된 지표 작성방법론과 일정 수준 이상의 통계 품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보고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런데, 글로벌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 가용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제공 출처가 불분명하여 수치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국제기구에 제공된 통계는 국가별 비교 연구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이 품질이 관리되지 않는 통계가 제공될 경우, 국가현황에 대한 왜곡된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과 다른 부처에서 생산된 통계가 국가보고플랫폼을 통해서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제안될 수 있는데([그림 2-5] 참고), 하나는 통계청 및 다른 기관이 별도로 보고 플랫폼에 자료를 제공하고 이 플랫폼에서 정제된 자료를 국제기구로 보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플랫폼은 SDGs 이행체계 내에서 운영·관리하되 통계전문가가 관여해야 한다. 여기에서 통계청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생산된 데이터와 통계를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 다른 하나는 부처에서 통계청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보고 플랫폼을 통해서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의 역할과 국가보고플랫폼이



[그림 2-5] 국가보고플랫폼 모형(안)

다소 중복적인 기능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두 경우 모두에서 지표에 대한 통계청의 관리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된다.

#### 4) 지표 서비스

국가에서 작성 및 제공된 SDGs 지표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 또한 통계청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는 국민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다. 통계청은 생산된 지표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것이 개인의 삶과 국가의 정책에 반영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 방안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승인통계는 통계청에서 운영 중인 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에 탑재하여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sup>17)</sup> 따라서 SDGs 지표체계 또한 통계포털에서 기존의 다른 지표들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지표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국가보고 플랫폼과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 5) 지표 보고서 작성

지표의 생명력은 국가정책의 평가 및 이를 통한 정책방향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때에 발휘된다. 통계청은 지표가 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담당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관련 분석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표 보고서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 해외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많은 나라에서 이미 SDGs 지표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여, SDGs 이행에 대한 자국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7) 물론 각 기관에서도 별도로 통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통계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처는 소수이며, 해당 부처 관심 통계 중심의 제한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내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32개 기관이며, 이중 별도의 통계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0개 기관이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비롯하여,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통계누리(국토교통부), 산업통계포털(산업통상자원부), 환경통계포털(환경부) 등이 대표적이다.

## 나.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통계역량 강화

SDGs 이행 체계 내에서 통계청의 역할은 단순히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SDGs는 통계생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데이터 혁명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조사에 기반한 통계 생산구조가 다양한 자료원 예컨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등을 통한 통계 생산 구조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지 측정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은 티어3에 해당하는 지표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소스와 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시의적절한 통계를 생산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활발히 검토 중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혁을 위해서 통계청 또한 그에 부흥하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UN 통계위원회는 SDGs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액션 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액션 플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지역별로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통계역량 강화는 글로벌 및 지역 액션 플랜과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은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따른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13년에 수립되었으며 이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4개의 중점전략 분야는 ①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 ②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③통계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④통계 인프라 확충이다.<sup>18)</sup> 2017년은 제1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①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 ②데이터 허브 구축 및 통계생산 다양화, ③통계자료 서비스 확대 및 활용 강화, ④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통계역량 확충이다. 이 중 1차 기본계획에 비해 발전된 전략은 통계데이터 허브 구축 및 통계생산 다양화 그리고 국가통계 거버넌스 확립 및 통계역량 확충이다. 특히 이 부분은 SDGs에서 언급하고 있는 데이터혁명과 관련된다. 대안적인 데이터 소스에 대한 개발과 이를 통한 모니터링 커버리지 향상은 SDGs의 통계역량강화와 밀접한데 그동안 한국통계청은 이 분야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이다.

18) 각 전략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통계 개발 및 개선: 필요 통계의 개발 및 개선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지역통계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물가 고용 소득 등 주요 관심 통계의 국민체감 개선, ②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통계자료의 대국민 공개, 통계자료의 통합치 제공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 및 KOSIS 강화 등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③통계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및 법적 근거 마련, 행정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전자조사 원격 탐사 제도 개선 등 선진조사 기법 확산, ④통계 인프라 확충: 통계품질진단 체계 개선 등 국가통계개선, 모집단 관리 및 국제협력 강화 그리고 통계인력과 예산 확충 등 국가통계역량 강화 등

통계청 내 역량강화를 넘어서 글로벌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고 천명한 SDGs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강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계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SDGs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통계역량 강화뿐 아니라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를 확대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다. 다양한 통계생산자 간 조정기능

현재 각 부처의 통계생산 및 활용 등을 조정하는 여러 제도가 있다. 통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의 수단으로는 통계기준설정, 국가통계승인, 통계품질진단, 통계정보종합관리 및 서비스, 통계예산검토, 통계수요조사, 통계기반정책관리 등이다(통계교육원, 2017). 통계청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방법을 통해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통계생산 과정을 검토하고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생산된 통계는 온라인을 통해 통해 대국민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의 이행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통계청이라는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관계부처, 생산된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실현가능하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러한 조정이 국가통계뿐 아니라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체 통계에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UN SDGs의 모니터링은 표준화된 공식통계에 기반한다고 여러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공식통계라는 용어가 모든 국가에 보편적인 것은 아니나<sup>19)</sup> 위키피디아 및 인사이클로피디아 혹은 일부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 등을 종합해 보면,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같은 기타 공공기관이 공적으로 발행한 통계’를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0)</sup>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법 및 공식문서에서 국가통계, 승인통계, 국가승인통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계 일부에서 공식통계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다. 공식통계의 개념과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통계유형을 통계작성기관에 따라서 분류해 보았다.

19) 각국의 통계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공식통계(폴란드, 일본)’라는 용어와 함께 ‘국가통계’(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 ‘연방통계’(독일, 스위스, 미국)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공식통계와 국가통계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영국, 벨기에, 터키, 아일랜드)도 있었다(임준규·김두만 2015).

20) 공식통계 기본원칙은 1992년 UNECE에서 채택되었고, 1994년 UN통계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승인되었다. 2011년 UN통계위원회는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원칙의 전문을 수정 및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수정 전문을 채택하였다. 이 안은 같은 해 UNECOSOC에 의해 지지되었고, 2014년 UN총회에서 결의되었다.

〈표 2-2〉 작성기관 유형에 따른 국가통계 분류

구간		내용
통계 작성 기관	승인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통계청장에 의해 승인된 통계
	미승인통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법상 대상이 아닌 통계
비지정통계 작성기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통계법상 대상이 아닌 통계 혹은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하는 통계

한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있다.<sup>21)</sup>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통계는 크게 통계작성기관에 의한 통계와 비지정통계작성기관에 의한 통계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승인통계와 미승인통계로 나뉜다. 공식통계의 개념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승인통계와 함께 미승인통계가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승인통계가 아니므로 통계청의 품질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이다. 미승인통계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르게 주목할 점은 사실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되는 승인통계 중에서는 비지정통계작성기관(민간리서치회사 등)에서 작성된 통계가 다수라는 것이다. 통계작성기관에서 실제 통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 등 한정된 부처이다. 실제로 국가승인통계의 약 50% 이상이 민간통계회사에 외주위탁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다(한국능률협회, 2017). SDGs 통계의 조정 대상으로 국가통계 및 비국가통계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22)</sup>

또한, SDGs에서는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조하면서 비공식통계가 활용될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주제지표(thematic indicator) 영역에서는 실험적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지표개발의 탐색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빅데이터를 공식통계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사업 등이 있으며, SDGs 이행 모니터링의 주체로 시민사회 섹터에서도 활발히 데이터를 생산 중이다.

21)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경제 및 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 등이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 등을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2) 사실 제6차 IAEG-SDGs 회의에서는 공식통계를 근간으로 한 모니터링에서 한발 물러나 ‘공식통계가 없을 경우 비공식(non-official) 통계를 허용하자는 기준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들어서 반대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SDGs 시대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통계의 대상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비지정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는 통계와 설령 승인통계라 할지라도 상당수의 통계가 실질적으로는 비지정통계작성기관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전반적으로 통계 문해력(literacy)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부, 특히 통계청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에 민간에서 생산되는 통계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와 민간통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한국능률협회, 2017). 통계청에서 표준적인 작업을 마련해주고 전파시킬 수 있는 통로들이 확보되면 SDGs 작업 효율화뿐 아니라 국가통계의 수준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 3. SDGs 지표 워킹그룹 설치

거버넌스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어떠한 유형의 조직체라기보다는 협력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볼 수 있다. 분산형 통계시스템 하에서는 통계청을 정점으로 여타 통계작성기관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sup>23)</sup>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참여와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개발그룹(United Nation Development Group, UNDG)은 의제 주류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체 또는 포럼 구성(Working with national multi-stakeholder bodies or forums)을 제시하고 있는데(UNDG, 2015), 이는 지표 체계 구축과 같은 일련의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SDGs 총괄이행체계 안에 지표분야의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것이다. SDGs 이행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보통 주제별 워킹그룹의 구성이 제안되곤 한다. 주제별 워킹그룹은 경제, 사회, 환경 혹은 5P, 혹은 17개 목표 그룹별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표 워킹그룹에 대한 논의는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통계는 SDGs 이행 거버넌스에서 범분야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및 예산 등은 이행수단의 핵심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이슈인 반면 데이터 및 통계, 모니터링은 SDGs 의제에서 새롭게 들어간 이슈인 만큼 향후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워킹그룹의 형태는 다양

23)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SDGs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에 기반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이라는 통계청의 현위치에서 국가통계활동 전반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명확하여, 게다가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통계청이 지표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각 부처들로 하여금 새로운 통계작성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장기적으로 통계청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지표구축을 위한 자료생산과 수집을 넘어 대국민 홍보와 정부부처 정책지원이나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한 것이다(심기춘 위원실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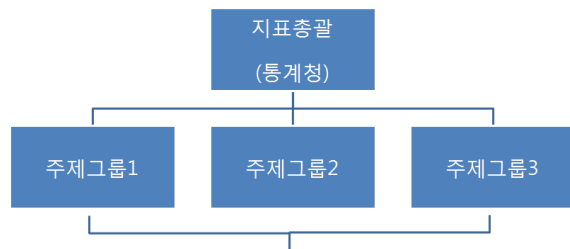
할 수 있다. 주제별 워킹그룹을 아우르는 형태의 워킹그룹이 되거나(모형1), 다른 주제별 워킹그룹과 동등한 선상에서 구성될 수도 있고(모형2), 다른 주제별 워킹그룹 하에 하위 워킹그룹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모형3).



[그림 2-6] 워킹그룹 구성 유형

지표 워킹그룹은 통계청에서 총괄을 맡되, 각 지표 주제별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로는 해당 지표를 작성하는데 관계되는 통계생산부처, 정책담당자 및 관련분야 연구자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그림 2-7]).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정책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이다. 효과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 모형1과 모형3을 결합한 형태의 워킹그룹 또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이 그룹은 몇 개의 하위그룹으로 구성된다. 경제·사회·환경 등 주제별로 혹은 여성·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인구집단별로, 아니면 데이터세분화·데이터 소스 발굴 등 통계이슈별로도 구성될 수 있다. 이 워킹그룹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열린 의사소통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SDGs 이행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구성 : 통계생산자, 정책담당자,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등

[그림 2-7] 지표 워킹그룹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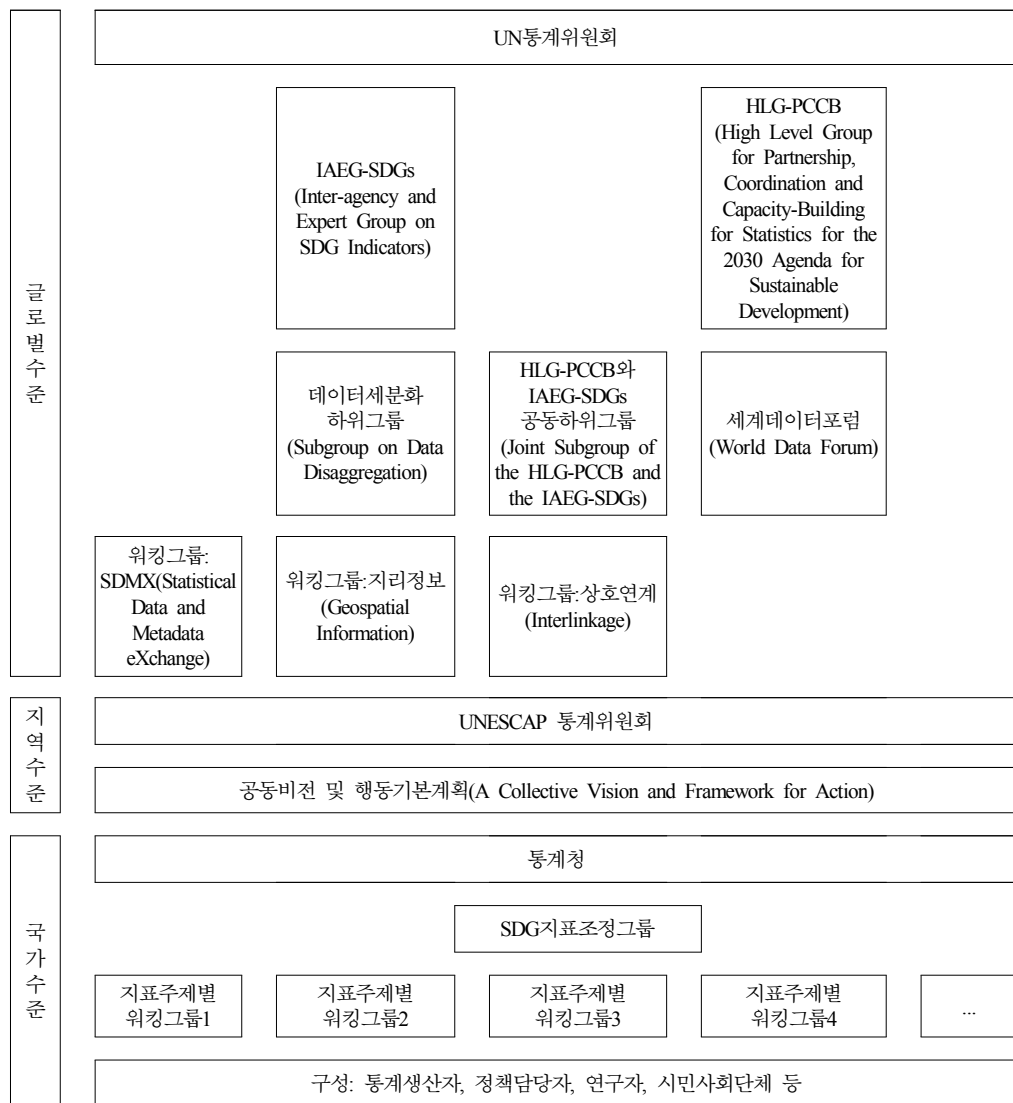
있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지표를 통한 정책 환류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표작성을 위한 각종 이슈와 방법론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분야의 역량개발 활동을 증진한다. 정기적으로 미팅을 실시하고 지표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오픈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표 워킹그룹은 SDGs 총괄체계 내에서 활동하되,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협력활동도 수행해야 한다. 글로벌지표는 2020년과 2025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통계 모범국으로서 역할을 점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통계역량수준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는 바 이 지역에서 SDGs 통계와 관련된 역량강화활동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제6절 결론

향후 구축될 국가 차원의 SDGs 이행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DGs 글로벌 및 지역, 국가 수준에서의 통계 거버넌스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SDGs에서 통계청의 조정역할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표 워킹그룹을 제안하였다. <표 2-3>은 각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현황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 2-3> 글로벌, 지역, 국가 수준의 SDGs 통계거버넌스



\* 국가수준의 거버넌스는 저자 제안사항임

아직까지 국내에서 SDGs 총괄적인 이행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SDGs 통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SDGs는 유엔에서 수립한 2030년까지의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장기 대응 전략이다. 각 국가는 함께 살아가는 지구에 대한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SDGs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는 모든 정책 수립의 근간으로 SDGs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초기 작업부터 활용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 이행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부터 통계 및 통계청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현 지속가능발전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는 통계청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SDGs 이행과정에서 통계청은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모니터링, 이행지원을 위한 통계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SDGs 내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통계청이 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더욱이 SDGs에서 통계의 역할은 단순히 지표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통계생산 패러다임의 변혁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통계청의 조정역할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SDGs가 지향하고 있는 참여와 포용의 기조 하에 통계 생산자 및 이용자, 정책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열린 의사결정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김갑래(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조선일보 2013, 10,11.
- 김석호 외(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통계개발원 연구용역 보고서
- 김의영(2016),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 한국의 실태와 제안, 국가전략 22권 1호: 66-87.
- 김태균 외(2016),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행정한류 추진전략 연구, 행정자치부 연구용역.
- 김희강(2012),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논의 대응 및 발전방안 연구.
- 박영실 외(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 조사연구 (18권 3호: 77-96).
- 박정호 외(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박정호(2016), 2016 국내 CSR 트렌드 조사, 지속가능경영원(www.bisd.or.kr).
- 시민넷(2017), 빈곤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변영: 2017 유엔 SDGs HLPF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 소진광(2007),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9권 3호.
- 여현덕, 박정민(2009), 유엔글로벌컴팩의 성격과 발전방향: 사회책임(CSR)과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되기'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서, 한국과 국제정치25(2): 119-147.
- 이성훈(2016), 한국정부의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외이행전략-시민사회의 역할, 국제개발 협력학회-한국개발정책학회 세미나 발표자료(216년 5월 12일, 세종).
- 외교부(2016), Year One of Implementing the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a Model of Development Success to a 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한국능률협회(2017), 민간통계 품질관리 제도화 방안, 통계청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2016),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현황 보고서 - 지속가능발전 국제 이행목표 연계.
- 통계청(2013), 통계행정편람, 내부자료.
- UN(2003), Handbook of Statistical Organization (3rd edition),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a Statistical Agency.
- UN(2017a),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7/2).
- UN(2017b),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Building for Statistics fo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N.3/2017/3)
- UNDG(2015), Mainstream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im Reference Guide to UN Country Team. available at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I/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Studie\\_NW\\_Sustainable-Development-Goals\\_Are-the-rich-countri-es-ready\\_2015.pdf](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I/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Studie_NW_Sustainable-Development-Goals_Are-the-rich-countri-es-ready_2015.pdf) (접속일: 2016.6.20.).

- UNESCAP(2017), Asia-Pacific Conference: Taking Collective Action to Accelerate Transformation of Official Statistics for Agenda 2030 [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summary\\_of-responses\\_SDGs\\_implementation\\_progrss.pdf](http://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summary_of-responses_SDGs_implementation_progrss.pdf)(접속일: 2017.9.10.).
- Pingeot, Lou(2014), 2015년 이후 발전 의제 내의 기업 역할, 323-338 2014 월드워치연구소.
- Seyle, D. Corner and Natthew Wilburn King(2014), 거버넌스 이해하기, 63-77,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2014 지구환경보고서), 월드워치연구소 엮음, 이종욱 황의방, 정석인 옮김, 도요새.
- Zimmerman, Monika(2014), 어떻게 지방정부는 지구 지속가능성의 요소가 되었는가, 301-319 2014 월드워치연구소.
- UNECE(2017),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Road Map on Statistic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부록>

<부표 2-1> 국가별 SDGs 이행 거버넌스 현황

국가명	총괄기구	SDGs 전략		통계청	이해관계자 참여메커니즘
		기존전략	신전략		
네덜란드	Association of Netherlands Municipalities/National SDG Commission/"ThinkandAct" commission	National Development Plan		Statistics Netherlands	
네팔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The Fourteenth Plan (2016/17-2018/19)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노르웨이	Inter-Ministerial Contact Group		Plan for National Follow-up of the SDGs	Statistics Norway	Såmediggi (Sami Parliament)
덴마크	Inter-ministerial SDG work group		Action Plan	Statistics Denmark	
독일	State Secretaries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ederal Statistical Office	Charter for the Future
말레이시아	National SDG Council	The Eleventh Malaysia Plan 2015-2020	Roadmap for Implementation Of SDGs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of Malaysia	The Malaysian CSO-SDG Alliance
몽골리아	National and Domestic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s		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	NSO	
멕시코	High Level Council for the achievement of the SDGs			SDGs 전문기술위원회(CTEOS)	Sustainable Alliance
미국	The U.S. Department of State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The Office of the U.S. Chief Statisticians	

국가명	총괄기구	SDGs 전략		통계청	이해관계자 참여메커니즘
		기준전략	신전략		
방글라데시	SDG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Committee	7th Five Year Plan		The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BBS)	
베네수엘라	Council of Vice 고위급협의회	2013-2019년 사회경제개발계획과		INE	
베트남	Politburo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Vietnam by 2030(VSDG)	General Statistical Office	
벨기에	Interdepartmental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nter-Federal Statistical Institute	The Feder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사모아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Samoa		Bureau of the statistics	
스리랑카			National Policy & Strategy on SD	Department of census and statistics	
스웨덴	Scientific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Statistics Sweden	
스위스	Interdepartmental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16-2019		2030 Dialogu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슬로베니아	Government Office for Development and European Cohesion Policy		the whole-of-society Vision of Slovenia 2050	Statistical Office of the Republic of Slovenia	
아제르바이잔	National Coordination Council for SDGs			State Statistics Committee	
아이슬란드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Icelandic Society		Statistics Iceland	



국가명	총괄기구	SDGs 전략		통계청	이해관계자 참여메커니즘
		기준전략	신전략		
아일랜드	Comhar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Sustainable Development : A Strategy for Ireland		Central Statistics Office	
아프가니스탄	National and Technical Consultation Working Groups	Peace and Development Framework		Central Statistics Organization	
에스토니아	Inter-Ministerial Working Group on SD			Statistics Estonia	Estonia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영국	UK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Five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오스트리아	Austrian Development Agency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policy			
이란	National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atistical Center of Iran	
이집트	Inter-Ministerial Committee		National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국가통계기관인 CAPMAS 내 지속가능발전실(Sustainable Development Unit) 설립	
이탈리아	Italian Council of Minister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Institutions,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s

국가명	총괄기구	SDGs 전략		통계청	이해관계자 참여메커니즘
		기존전략	신전략		
인도네시아	National SDGs Secretariat	National Action Plan (National Development Plan)		Statistics Indonesia	
일본	SDGs Promotion Headquarters		SDGs implementation Guiding Principle		
체코	Government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zech Republic 2030			
칠레	National Counci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카자흐스탄		yes		Committee on Statistics MNE	
감보디아		NSDP 2019-2023			
코스타리카		The 2015-2018 National Development Plan			
콜롬비아		National Development Plan 2002-2006			

국가명	총괄기구	SDGs 전략		통계청	이해관계자 참여메커니즘
		기준전략	신전략		
콜롬비아	ODS Commission 이라는 2030 의제 및 SDGs 이행을 위한 고위급 위원회를 신설	CONPES 2030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DANE	
키르기스스탄		yes		National Statistical Committee KR	
태국	Nation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National Development Plan, National Strategic Plan, National Revolution Agenda		NSO	
핀란드	Coordination Network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for Agenda 2030	Indicator network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필리핀		Philippine Development Plan		Philippin Statistical Authority	
프랑스	Inter-ministerial Representa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ational Action Plan for SDGs		
호주	National Sustainability Council		Sustainable Australia - Sustainable Communities : A Population strategy for Australia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주: 2016년과 2017년에 HLPF에 제출된 자발적 국가별 보고서 및 2017 아태 컨퍼런스(UNESCAP, 2017)에 제출된 국가별 이행전략 자료를 취합한 결과이며, 자료에서 파악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공란으로 두었음